

광주 중앙공원 '반쪽 개발' 우려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노후지역 사업지구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은 중앙공원 개발이 법적소송 등에 휘말려 반쪽 개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 측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권리잡화에 따른 법적 소송 등에 휘말려 반쪽 개발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2개 지구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변경했다.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에서 (주)한양으로 변경했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도시공사는 우선협상자 지위, 즉 사업권을 가진 (주)한양을 (주)한양으로 변경했다.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시는 이를 뒤 도시공사와 (주)한양에 '사업자 취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1주일간 여유를 줘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금호 측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의신청 시정과의 면담 등을 통해 1월11일까지로 연장을 줄 것을 요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금호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금호 측 고위 관계자는 "공공 지침 이의신청은 불가피에도 이를 받아 줬고, 평가자료 유출도 문제인데다 감사위원회가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위와 2위가 뒤바뀌었음에도 상세한 근거도 설명도 없이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어 탈락업체 입장에선 법적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고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애초 평가에서 93.6점으로 총점 84.8점을 기록한 (주)한양을 8.8점이러는 큰 점수차로 따돌렸음에도 갑작스레 우선협상 자격을 반납해 사업포기 배경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의혹을 일고 있는 가운데

금호, 2지구 사업자 변경 이의신청·소송 준비 시민단체 "민관거버넌스 합의 흔들" 대응 모색

이의신청서마저 제출하지 않아 사업권은 한양 측에 넘어갔다. 시는 지난해 28일 한양 측에 "재롭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공식 통보했다.

도시공사는 민관거버넌스 합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중앙1지구 241만㎡를 모두 사들인 뒤 이 가운데 21만㎡, 비율로는 8.8%를 택지(754가구 규모)로 조성,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분양하고 택지개발수익금 전액은 공원조성기금으로 내놓아 광주시가 직접 운영토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섰다.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렸다", "특정 업체 길타기 아니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평가 점수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의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전체 '판'이 크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본 판단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중사모),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시민생활환경회의 등은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름 등으로 인해 난개발 방지, 공원부지 최대한 보존, 광주시 재정 투입 등 민관거버넌스의 합의 사항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특히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했는데, 감사 이후 도시공사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면서 중앙 1지구의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주도로 협의와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땅값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국토부 지침을 어긴 사업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재공고를 하면

되는데 왜 점수를 변경 적용하면서까지 사업자를 바꾼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해명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인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즉 '독이 든 나무에 열리는 과실은 역시 독이 든 만큼 그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광주시가 "썩은 살은 도려내겠다"며 음침미수와 일반백계를 강조했음에도 수사외파나 고발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국장(환경생태과)과 과장(공원녹지과), 계장(공원조성 담당)만 최다 교체해 행정 연속성에도 일정 정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공원일몰제 시행인 2020년 6월 이전에 큰 틀의 매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반쪽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설 승차권예매, 기다리는 시민들

설 열차승차권 현장예매가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역 매표소에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예비 고1학생들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 시킨 고교 적발

나주시역 한 고등학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들을 사설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나주 A고등학교가 지난 7일부터 신입생 중 25명을 광주에 있는 사설학원에 보내 영어와 수학 과목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A고교 학교법인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곳

으로 드러났다.

A고교는 지난해 나주시로부터 방과후학습 비용으로 예산 7400여 만 원을 지원받았다. 학원비 지원 논란이 일자 학교측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A고교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지난해 말부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해 현재 90여 명의 입학생이 확정돼 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

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고교의 선행학습은 학부모가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김정환 기자

화물차 언덕서 미끄러져 버스 충돌 1명 사망

광주의 한 농장 언덕에 정차해둔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시내버스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경상을 입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께 광산구 우산동 모 농장 언덕에 정차해둔 A(62)씨의 8t 화물차가 10m 가량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울타리를 뚫고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B(46)씨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화물차 기사 A씨가 숨졌고, 버스 기사 B씨와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빨갭으로 쓰는 목재를 농장에 납품하던 중 정차해둔 화물차가 갑자기 언덕 아래(약 15도 경사)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차 비취 쪽에 고정해둔 고발장자가 파손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선장없이 화물선 운항한 기관장 적발

완도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선장없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9일 선박 자격증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6시41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98t급 화물선을 선장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화물선은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지만 선장은 승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레미콘 차량을 선적 후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항에 입항해 레미콘을 하역한 뒤 완도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선은 운항 중에 어망에 걸려 표류했으며 인근에서 조업 중 이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어망을 제거한 뒤 화물선을 안전지대로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2개월만에 또 인터넷 중고사기 20대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적발 2개월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수천만원의 가로를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발송을 시중가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매자 B(33)씨로부터 20만원의 받는다 등 지난해 8월5일부터 최근까지 신혼부부를 비롯해 170여명으로부터 5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40만원 상당의 발송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실제 상품을 구입해 일부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환불까지 해준 뒤 댓글을 달게 해 다른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시비붙은 일행 착각' 흥기 휘두른 4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으로 착각해 다른 술집손님에 흥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5분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B(23)씨에 흥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B씨 등 4명을 앞서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일행으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자리 합석 문제로 승강이를 하던 다른 일행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흥기를 챙겨 술집을 다시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흥기를 휘두른 직후 B씨 친구 C(23)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